

김원이 의원, '한국형 원스톱삽법'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상정

탄소중립 실현에 꼭 필요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가능
입지·주민수용성 확보·각종 협의 및 인허가 효율적 추진

김원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한국형 원스톱삽법)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에 상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위해 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형 원스톱삽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풍력발전은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정에너지"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사업자가 입지 발굴에서부터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다단한 인허가를 직접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평균 6~7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풍력발전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담은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원스톱삽법은 정부가 직접 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복잡·다단한 인허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주민수용성을 강

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어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 '연중 상시 국감법' 대표 발의

김원이, "증인 출석 포함한 국정감사 연중 분리 시행 내실화"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연중 상시로 증인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를 연중 분리 시행해 감사를 내실화하자는 것이 요지다.

상임위 의결로 감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변경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지

하도록 했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이 대부분의 감사를 정기회 기간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시행해 왔다.

국회 정기회 직전에 국정감사가 정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정작 중요한 예산안 심의,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가 부실화되는

등 효율성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감사 대상기관은 짧은 기간 자료요구가 집중돼 업무가 마비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감사가 연중 1회만 실시되다 보니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감을 나눠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자는 취지"라며 "정기회 기간에 예산안 심의와 법률안 심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목포문학박람회 성공적 개최 준비 박차

목포시, 개막(10월 7일) 앞두고 막바지 점검

문학 목포알리기·코로나로 지친 국민에 휴식처 제공



목포시는 전국 최초로 개최할 예정인 '2021 목포문학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목포문학관, 평화광장, 원도심 일원 등에서 2021목포문학박람회가 열린다.

시는 박람회 개막 30일을 맞아 7일 추진 방향, 프로그램 등 박람회 전반의 모습을 공개하고 성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문학(文鄉) 목포 전국에 알리기 ▲문학의 범위 확장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처 제공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운영 ▲목포의 문화유산과 문학의 만남 5가지를 박람회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전시, 체험, 강연, 경연 등 109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학으로서의 면모를 알리기 위해 목포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했던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한국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유명 문학인들을 집중 조명하는 '4인4색 문학제' 등을 진행한다.

또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문학산업의 다양성을 선보이는 출판관, 미디어갤러리(웹툰&드라마&영화관), 글자콘텐츠관, 독립서점관, 헌책방관, 남도문학관 등을 운영한다.

문학을 통한 휴식의 장소 제공한다. 문학 웰니스테라피존이 그것으로 주행사장인 목포문학관 인근에 위치한 갯바위 입암산 생태공원에서 문학 트레킹 등 문학에 매개로 치유하고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유명 작가와의 만남, 문학콘서트, 문학 아트마켓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이와 함께 근대문학길투어, 목포문화과 일주일 살기 등 문학여행 상품을 출시해 관광과의 접목을 꾀했다.

유명 문학인들의 생활거점이었던 근대역사문화공간, 목원동 등 원도심에서는 작가 토크, 연극 공연 등을 비롯해 작가들의 생가와 작품 배경지를 둘러보는 골목길 문학관을 운영해 목포의 문화유산과 문학의 만남을 시도한다.

한편 시는 소설가 한승원씨와 시인 황지우씨를 공동 자문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목포 출신 문학평론가인 황정산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를 운영해 세부 프로그램과 운영 계획을 마무리했다.

김원이, 조선업 경쟁력 강화 '감사패' 받아



김원이 의원(목포)은 "지난 3일 현대삼호중공업(주) 사내협력사협의회(회장 이안용)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협력사협의회 이안용 회장은 감사패를 통해 "김원이 의원이 목포, 영암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 및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에 헌신의 노력과 지원을 해주셨다"면서 "사내협력사협의회 66개 회원사

를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접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함을 새삼 느낀다. 지속된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기업인과 노동자가 함께 노력해주시는 덕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따뜻한 추석, 민생안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희망회복자금 지원!

추석 이전 90%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촉진 새 유통법안 발의



주철현, 중간 유통단계 개선...지역수산물 온라인 거래 등 촉진 직거래 시스템, 직거래 촉진센터 등 정부 지원도 구체화

주철현 의원은 새로운 온라인·직거래 유통 환경이 담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역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수산물 유통과정 전반에 획기적 개선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개정안에 수산발전기금을 이용한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수협중앙회의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운영, 해수부의 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역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원이 많았던 위판장 개설자와 중도매인 등이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등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통이 금지된 불법 부산물의 범위를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물 전체'로 확대한 점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수산물 직거래'와 '지역수산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수산물유통 이력의 추적 관리를 위해 해수부장관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권을 부여토록 했다.

주 의원은 "현행법은 대형 사업자나 일부 생산자만 참여하는 유통구조의 근본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불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국회 앞 산림비전센터에서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한국수산물유통포럼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주최·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이헌동 부경대학교 교수가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 조지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이 '스마트 식품콜드체인 체계 구축에 대해 발표했다.

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 곳곳에 비대면 활동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수산물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산물의 유통환경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철현, 전남 고수온 피해 긴급 대책 마련 '분주'

6일 화정면 일대 고수온 피해 현장 방문...“지금이 골든타임”

해수부 고수온 긴급 추가예산

적극검토...전남지역 8억원 지원

주철현 국회의원이 지속되는 폭염으로 전남에서 발생하는 고수온 양식어류 폐사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6일, 고수온 집단폐사가 발생한 여수시 화정면 일대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양식어가 고충을 청취했다.

주 의원은 현장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에 전남 지역 해안에서 발생하는 고수온 피해 긴급 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해수부도 고수온 대응 긴급예산을 적극 검토해 전남지역에 8억원의 추가예산을 확정했다.

해수부가 긴급투입 검토 중인 예산은 고수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산소공급기,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 장비구입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해수부는 올 여름 고수온 대응을 위해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중에서 12억5000만원이 전남지역 10개 시군에 지원됐다.

하지만 폭염과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가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여수 가막만은 최근 수온이 29도까지 오르고, 지난 주말동안만 우럭 13만마리와 전복



4000마리가 폐사하는 등 고수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출하가 가능할 정도로

큰 우럭이 폐사돼 가두리에 가득 떠 있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여수 원도심 활성화 특별교부금 11억 확보

이순신광장 솔라스퀘어 5억,
만흥-오천 도로 확포장 6억

주철현 의원은 여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로부터 여수 관광의 중심지인 이순신광장 솔라스퀘어 조성사업에 5억 원, 오천-만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이순신광장 솔라스퀘어 조성사업은 준공 11년이 지난 이순신광장의 바다에 태양광·LED패널을 매립해 솔라스퀘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장애물이 없는 광장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어 오천-만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오천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총 160억원 규모로 주 의원이 민선 6기 여수시장 때 입안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에 6억 원의 국비 확보로 시 재정부담 경감과 사업의 조속한 준공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두 사업을 위해 확보한 11억 원의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원도심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따뜻한 추석, 민생안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희망회복자금 지원!

추석 이전 90%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여수~남해 해저터널 예타 통과...영·호남 20년 숙원 해결

김희재 의원, 기자회견 등 통해 해저터널 건설 촉구 '앞장'

여주시와 경남 남해군을 잇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사업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여 년만으로, 이터널이 건설되면 영·호남 교류 및 남해안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안도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영·호남 주민들의 공동 숙원인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포함됐다.

이번 예타 통과로 오는 2029년까지 국비 6824억 원이 투입돼 여수시 상암동과 남해군 서면을 잇는 총 7.3km 길이(해저터널 4.2km, 육상부

터널 1.73km, 진입도로 1.37km)의 도로가 건설된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필요성은 20여 년 전 제기됐다. 1998년 '한려대교' 건설로 양 지역 연결을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됐으나, 건설비가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성이 낮아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80km가량 되는 여수~남해 이동 거리가 8km로 줄고, 이동시간도 1시간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앞서 김희재 의원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함께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제5차 국도계획에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 동서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저터널을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남도와 경남도,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지난 3월 해저터널을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예타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여수시민과 남해군민이 힘을 모아 20여 년 동안 넘지 못한 첫 관문을 통과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서해안에서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I자형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미연결 구간으로, 국도 균형발전과 동서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해저터널은 여수와 남해뿐 아니라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교류 활성화를 가져와 결국 새로운 동서통합의 시대를 열 것"이라며 "해저터널이 무사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희재, "여수~남해 해저터널 예타 통과 환영"

"4전 5기 23년 만의 쾌거...남해안 관광벨트 초석될 것"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국도77호선)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남해안 관광벨트 완성의 초석이 마련됐습니다."

김희재 의원은 지난달 24일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은 4전 5기의 노력이 가져다준 23년 만의 쾌거라며 서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여수~남해간 국

도 77호선을 길이 7.31km, 폭 4차로의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24억 원에 달한다.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동서통합을 동시에 이뤄낼 것으로 평가 받는다.

김 의원은 "해저터널이 현실화되면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연도교와 함께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을 아우르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관

광자원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호남 상생 실천의 큰 획을 긋는 이정표를 제시하고, 남해안권이 세계적인 관광명소이자 국제행사 개최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건설을 건의하고 촉구했다. 지난 4월26일에는 김 의원과 하영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남도와 경남도, 여수시, 남해군이 주관하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희재 의원, 여순사건 '국가 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김희재 의원은 18일 여순사건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 통과될 당시 본회의에서 "올해 10월 19일 여순사건 73주기 추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모두 함께 참석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여순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여순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10월 19일을 국가 기념일인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고, 추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역사적인 특별법 제정을 이뤄냈으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이뤄내고 치유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에는 법에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4·3사건과 같이 여순사건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그 길을 모색하는 한편, 남아 계신 분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하루 빨리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뜻한 추석, 민생안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희망회복자금 지원!

추석 이전 90%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73년 통한의 세월, 오늘에서야 한(恨) 풀었다”



여순사건특별법 만장일치로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철 의원, “화합과 통합의 위대한 역사 시작”

순천·여수를 넘어 전남·북, 경남 도민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6월 2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소병철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이야말로 화합과 통합의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간 총 8번의 발의와 28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년의 국회 장벽을 넘어 73년의 피맺힌 한을 풀 수 있었던 데에는 그야말로 법안의 성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소처럼 밀어붙인 소병철 의원의 전략과 독심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소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전남 동부권 의원들(김희재, 서동용, 주철현)과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협약식을 이끌어 내고, 여순사건 유가족과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손수 한 글자 한 글자 법안을 성안해 지난 해 7월 28일, 지금의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같은해 9월 10일,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고 12월 7일, 사상 최초로 국회 행안위 주관 입법공청회도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여순사건을 다루자는 입장을 견지해 법안 진척에 고비를 겪었지만, 소 의원이 전해철 행안부장관과의 담판을 통해 입장 선화를 이끌어 내면서 특별법 심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후 소 의원은 행안위 소속이 아님에도 행안위 법안소위에 배석, 2차례의 축조심사 기간 중 여야 위원들을 설득하고 발언신청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4월 22일 힘겹게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달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의 상정이 예정된 당일 오전까지 야당위원의 이견으로 통과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소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야당의 원과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수정문안을 만들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를 견인해냈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사위에 상정하기까지 소 의원은 송영길 대표를 포함해 당 원내지도부와 박주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당 법사위원들을 만나 특별법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힘 신임 법사위 간사 윤한홍 의원을 찾아가 특별법제정을 호소할 것을 비롯해 야당 법사위원들에게 일일이 친전을 전달하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결국 특별법은 6월 25일 법사위에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발의 1년도 안 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어 낸 소 의원의 남다른 노력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 의원은 특별법 통과 직후 “오늘의 이 감격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73년의 피맺힌 한, 20년 동안 국회에서 8번의 법안 통과가 무산된 좌절을 오늘로써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긴 세월 견디어 오신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힘을 모아주신 이낙연 전 대표, 김태년 전 원내대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께 감사드리며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박재호 간사, 특별법 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오신 김영록 전남지사, 그리고 대응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박완수 행안위 간사, 이명수 법안소위 간사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여야 행안위·법사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시종일관 지지해주신 이규종 유족연합회님과 박소정 여순법 제정 범국민연대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따뜻한 추석, 민생안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희망회복자금 지원!**

추석 이전 90%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서동용 의원, 서울대 '백운산 소유 논란' 관련 입법 추진



재산 양도 목적 구체화...협의대상에 지자체장 추가

광양의 명산인 백운산 서울대 소유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가 공유재산 무상양도 시,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이 추진된다.

서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대법 제22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에서 양도의 목적을 '교육·연구, 산학협력 등'으로 구체화하고 협의 대상에 지자체장을 추가했다.

서울대는 지난 4월 평의회 정책과제로 '학술립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보

고서를 발표하고 학술립 무상양도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해당보고서에는 '서울대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서 명백히 무상양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직무행정상 법률위배'에 해당하며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서 의원은 국가가 서울대에 무상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교육·연구, 산학협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무상양도 추진 시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협의해야 할 대상으로 현행 기재부장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백운산 내 서울대학술립은 일제가 식민 통치 강화를 위해 1912년 조선토지조사사업을 벌이면서 일본 도쿄대를 위해 연습림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사실상 강탈당한 지역민의 아픔이 스며 있는 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는 경쟁력과 자율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교육과 무관한 수익사업 확대에만 집중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국립대로서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지역위 '더불어자치학교' 1기 수료식

서동용 의원 '공정이란 무엇인가?' 특강도 실시



순천·광양·곡성·구례(을)지역위원회(위원장 서동용)가 당원 역량강화를 목표로 6월부터 진행한 '더불어자치학교' 1기 수료식이 지난 달 24일 광양새마을금고 3층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은 1부 서동용 의원 특강과 2부 수료증 및 우수수강생 표창 수여로 나뉘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1부 특강 강사로 나선 서동용 의원은 '공정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강의를 펼쳤으며 "공정을 말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간과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고, 공정의 요구가 가져온 또 다른 차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수료식에서는 전원 낙오자 없이 수료할 수 있었음을 수강생 모두가 자축하며, 소감을 말하고, 수료증과 우수수강생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수강생의 과반 넘게 개근을 했으며, 수강생들은 소감을 통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 높고 밀도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만

족감이 높았음을 표현했다.

'더불어자치학교'는 1기를 8월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반응이 뜨거워 8월 26일부터 2기를 모집해 오는 9월~12월 초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9월 14일 2기 첫 강사로는 전라도닷컴 발행편집인이자 광주문화재단 황풍년 대표가 예정돼 있으며 이후 각계의 유명 전문가, 교수, 작가 등을 초빙해 내용을 더 풍성하게 채울 계획이다.

여순유족회, 서동용 의원에 특별법 제정 감사패



순천시는 지난 7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순천지역 유족과 특별법 통과에 헌신한 서동용·소병철 국회의원과 순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규중 여순항쟁 유족연합회 회장과 권종국 순천유족회 대표는 73년만에 제정된 특별법을 기념하며 유족과 시민단체 등 73인의 감사 메시지를 담은 액자를 두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규중 회장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해 주신 소병철·서동용 국회의원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특별법 제정까지 올해 한해의 노력과 염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73년간 많은 이들의 한과 염원과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며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으로 미래로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따뜻한 추석, 민생안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희망회복자금 지원!

추석 이전 90%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나주 초강력 레이저시설, 화순 백신 실증 기반 구축사업 등

내년 나주·화순 신규사업 12건, 1조4천626억 규모 확보



신정훈 의원, 예결위원으로 마지막까지 설득 노력 “성과”

내년도 나주·화순 지역 주요 신규사업이 총 12건, 사업비 규모로는 무려 1조4천6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1일 ‘나주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총사업비 9천억)’, ‘화순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총사업비 450억)’,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지도 58호선 확장(총사업비 3천64억)’ 등 나주·화순의 미래 신성장동력, 지역 현안사업, SOC 등 굵직굵직한 사업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대 개교와 함께 호남이 앞으로 국가 과학기술과 미래 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또 화순의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사업’,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총사업비 430억)’ 등 바이오·백신분야 신규사업의 경우,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에 따라, 전남이 우리나라 K-백신을 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나주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425억) ▲나주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145억) ▲나주 EV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체계 구축·운영(// 450억) ▲나주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본원 증축 추진(// 234억) ▲나주 도시숲 조성(국립 Forest

Play Zone 조성) 사업(// 100억) ▲화순 펩타이드 의약품 연구개발 기반 구축(// 220억) ▲화순 치료백신 및 세포치료제 상용화연계 고도화 사업(// 86억) ▲화순 꿀벌 밀원숲 조성사업(// 22억) 등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정부 예산안 확정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당국 설득 노력을 경주해 온 신 의원은 “이번 성과는 코로나19로 정부 각 부처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축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르다”면서, “이런 성과는 막판까지 함께 노력해준 전남도와 나주·화순 관계자들, 그리고 조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역주민 덕분”이라며 각별한 고마움을 전했다.

신정훈 의원, 소통의 날 맞아 수해 현장 방문

“다양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매주 토요일 오전9~11시 격주로 진행

신정훈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첫 번째 소통의 날 행사가 지역민의 삶 터인 현장에서 열렸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왕곡면 양산리 도로 침수 피해 현장을 시작으로 수해 현장을 방문해 호우 피해 상황을 살폈다. <사진>

신 의원은 최명수 전남도의원을 비롯해 이상만·강영록·지차남 나주시의원, 김선일 농어촌공사 나주시시장 등과 함께 장마철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대비책을 논의의 점거했다.

왕곡면 양산리 도로 침수 피해 현장에서는 대과대와 종자대 등 신속한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과 국도 배수관리 대책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봉황면 옥실마을과 세지면 내정마을을 수해 현장을 찾은 신 의원은 농어촌공사와 현장 협의를 갖고 배수로 확장과 정비 대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왕곡면 양지촌 마을회관을 찾은 신 의원은 마을 주민들의 에너지 국가산단 편입 건의와 관련 한국에너지공대를 비롯한 고도화된 R&D 인프라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를 국가산단과 연계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을 이끌 핵심거점, 광주·전남 경제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발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통의 날은 신 의원이 직접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답하는 자리로 지역민 누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있으면 사전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나주와 화순을 격주로 순회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 내 시·도 의원들과 함께 다양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지도 58호선 예타 통과

신정훈 의원, “전남 동부권을 잇는 최단거리 교통망 구축”

나주 금천-화순 도암 간 12km 구간을 잇는 총사업비 2855억 원의 국지도 58호선 사업이 지난달 24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날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 나주 금천-화순 도암 간 12km를 잇는 국지도 58호선을 비롯해 총 38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나주 금천-화순 도암 간 12km 구간이 예타를 통과함으로써 나주혁신도시와 전남 동부권을 잇는 최단거리 교통망이 구축돼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이 명실상부한 전남중부권 고속화도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전남도와 함께 예산 당국을 설득해온 신정훈 의원은 “나주 금천-화순 도암간 4차로 신설로 그동안 불편했던 도로 환경이 대폭 개선, 나주와 화순 두 지역 간 소통이 원활해지며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화순 도암-화순 춘양 간 8.6km(총사업비 1104억 원 예상) 구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따뜻한 추석, 민생안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희망회복자금 지원!**

추석 이전 90%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담양·함평·영광·장성 핵심사업 내년 정부 예산 대거 반영

담양 한국정원문화원,
장성 국립심뇌혈관센터 및
아열대작물실증센터

함평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영광 e모빌리티 예산 등



이개호 의원, “신규사업 추가 반영 및 예산 증액 노력하겠다”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립기관 설립 및 특화 산업 진흥예산이 대거 포함돼 내년에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해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담양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36억 △장성군과 함께 조기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립심뇌혈관 센터 설치 5억 △장

성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구축 60억 △함평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319억 등 지역 발전 신성장 동력으로 여점 추진 중인 국립기관 설립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또 e-모빌리티산업을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영광군은 △2022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5억 △초소형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 20억 △e-모빌리티 기반 소형 수소연료전지 실증 인프라 구축 24

억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31억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48억 △e-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56억원 등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SOC 사업으로는 △함평~해보 국도 24호선 시설개량 72억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건설 19억 △광주 3순환 고속도로(본량~진원) 19억원이 정부안에 포함됐다.

이개호 의원과 담양·함평·영광·장성 4개

군은 올 초 부처 예산 편성 및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각 부처 장관 및 차관 등을 만나 지역 숙원사업의 내년 예산반영 필요성을 설득하고 정부안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된 것은 뜻 깊은 일이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신규사업 추가 반영 및 기존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농지은행관리원’ 설치로 투기 방지 및 관리 효율성 도모
농지은행사업 자료 목록 구체화 및 제공 의무 명시

이개호 의원이 농지투기 방지 및 농지은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2건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초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해 매입한 땅 대부분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한 개정안은 ‘농지은행관리원’ 설치를 통해 농지 현황을 조사·감시하고 정보수집 분석 제공 등 농지 상시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 개선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

한 농지은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료 및 정보 요청 목적과 목록을 구체화하고 자료제공 의무도 명시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 외에도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 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는 ‘농지법’ 개정안,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이 의원은 “논, 밭을 농사가 아닌 돈 버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농지투기는 근절돼야 한다”며 “농지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자원이자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 “영광 레미콘 노사합의 환영”...

“지역발전 동력으로 승화되길 기대”



이개호 의원은 지난달 14일 “영광 지역 레미콘 사태가 노사합의를 통해 해결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레미콘 6개사 대표들과 다시 일 자리를 찾게 된 29명의 레미콘 기사를 비롯한 건설 노조원들에게도 그 동안의 노고와 대응적 결단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노사합의를 통해 석달 가까이 빛어졌 혼란과 분열이 말끔히 사라지고 노사가 합심해 레미콘 운송 정상화와 함께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영광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일어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를 비롯한 지역정치권도 노사 문제에 대해 다시금 통찰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해 건강한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따뜻한 추석, 민생안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희망회복자금 지원!

추석 이전 90%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장흥·강진·해남·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승남 도당위원장, 송영길 대표와 수해 현장 방문 등 성과
피해복구비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공공요금도 감면

지난 7월 초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장흥·강진·해남 3개 군과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3개 군 및 4개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7월 2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승남 도당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전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7월 1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남해안 일대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피해 복구액 추경안 반영 등을 촉구했다.

김 도당위원장은 이어 송영길 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를 방문, 전남 폭우피해 복구 지원 건의문을 전달하고 당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17일에는 송영길 대표와 함께 강진 마량 전복 양식장과 고흥 벼는 침수현장을 방문, 피해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억~42억원)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 5,000만~10억 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

김승남 도당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도 빠른 재난 복구, 피해 지원금 현실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피해복구에 함께 노력해주신 지원봉사자와 지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선 지난 5~6일 해남에 최고 531mm를 비롯해 장흥·진도·고흥 등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강진 마량 전복 폐사 복구지원비 79억 원 확보

전복 폐사 복구비(40억), 재해예방 가두리그물망 개선(24억), 재난지원금(15억)

보조 및 융자 45억도 지원키로

김승남 국회의원은 지난달 23일 강진 마량 전복 폐사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79억원(국비, 지방비, 재난지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한 강진 마량 전복양식 피해 어가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우량종묘 실증사업을 통한 복구비 40

억 ▲재해예방형 가두리 그물망 개선사업 24억이 편성됐다. 재난지원금 15억(어가가당 최대 5천만원)과 보조·융자 45억(어가가당 1억 5천만원) 규모의 지원도 포함됐다.

지난 7월 초,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강진 마량 전복양식장이 100% 폐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김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복 양식어가 피해 복구를

위한 ▲폐사 복구비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능동형 재해예방 가두리그물망 설치·보급 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하고, 이번 추경안에 복구비 예산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와 당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추경 예산을 통한 복구비 지원으로 올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어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취임 1년

“원칙과 공정으로 코로나 극복, 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룰 것”



“총선 직후 다짐했던 겸손과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원칙과 공정으로 도당을 이끌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이루는 한편 전남의 현안들도 반드시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8월 19일 무안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열린 전남도당 상무위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도당위원장에 추대된 김승남 도당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달 18일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혔다.

“2022 재집권의 힘! 원칙·공정 - 강한 전남도당 건설!”을 기치로 도당을 이끌어온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50만 전남 당원과 함께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전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현안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힘 합쳐 인구감소 위기 극복 전남 현안사업 추진에도 ‘앞장’

이어 지난 1년간의 도당위원장 활동사항을 당원들에게 보고하고 “당의 뿌리이자 핵심 ‘텃밭’인 전남의 당원들이 앞장선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지역 정치권과 혼연일체되어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 개교 및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올해 사상 최대인 8조원에 가까운 전남의 국비예산 확보 ▲4·7 재·보선에서의 전국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3곳에서 치러진 재·보선 승리의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지난달 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장흥·강진·해남 3개 군과 진도군 진도읍과 군내·고군·지산면 등 진도군 4개 읍·면에 대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냈고, 당의 정체성 확립과 당원 역량강화를 위해 선출직 및 핵심당원 교육연수 강화, 지역위원회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자치단체장에 대한 당의 직권조사를 요청, 제명처분을 내리는 등 선출직 당원의 투기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농업인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과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남 당원들과 함께 선봉에서 서겠다”고 다짐했다.

따뜻한 추석, 민생안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희망회복자금 지원!

추석 이전 90%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윤재갑 국회의원, 농식품부 목적 외 ‘농특세’ 사용 질타

추가 세수 9,200억은 소비 쿠폰에만 예산 투입
농촌에선 농업기반사업 미비로 농경지 침수 피해

윤재갑 의원은 최근 실시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농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농어촌특별세’가 간접 지원 형태인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사업으로 변질된 것을 질타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간 약 5.5조 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수 31.5조 원이 주요 재원으로 구성됐고 그 가운데는 농특세의 추가 세수 9,200억 원(2.9%)

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 추경안에는 농업·농촌 직접 지원 예산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사업만 담겨 있다.

농식품부가 농특세를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동안, 정작 농촌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집중호우로 농경지 약 25,000ha가 침수됐다.

실제로 진도의 ‘고군지구’와 ‘의신지구’는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05년과 ’06년부터 ‘배수개선사업’을 요청해 왔으나, 예산 부족으로 16년을 대기한 끝에 금년에서야 착공을

했고, 준공은 4년 후이나 가능한 실정이다.

그 결과, 해남군과 진도군에서는 10,000ha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300여 가구가 침수돼 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윤 의원은 “추가 세수가 확보된 농특세는 그동안 예산이 없어 지연되고 있는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코로나와 농산물 개량으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추가 세수의 30%는 농업·농촌 직접 지원 하라”고 촉구했다.

윤재갑, 진도 폭우 피해
전복양식어가
국비 32억 지원 확정

윤재갑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복양식어가 지원하기 위한 국비 32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집중호우로 진도에서는 전복 1,479만 마, 약 113억 원의 전복양식어가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진도에는 504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122대, 주택 241가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5,149ha의 농경지와 전복 양식장 등 농어업기반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윤 의원은 피해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추경안에 추가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그 결과, 가두리그물망 설치지원 국비 12억 원, 전복우량 종묘실증사업 국비 20억 원이 반영됐다.

윤 의원은 “턱 없이 부족하지만,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코로나와 폭염으로 어려운 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재갑 “해남군 신청사에 자연친화적 실내정원 조성”

해남군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 공모사업 선정

윤재갑 의원은 9일 해남군이 산림청에서 공모한 생활밀착형 숲(정원) 조성사업에 선정돼 신축된 해남군청 청사 유휴공간에 실내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코로나 19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IOT, ICT 등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은 군청 벽면, 기둥, 바닥 등에 실내 정원을 조성해 청사 이용객과 직원들에게 자

연 친화적인 휴게·문화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공공시설을 정원으로 조성해 우리 군민들에게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에 선정돼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따뜻한 추석, 민생안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희망회복자금 지원!

추석 이전 90%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내년 정부예산에 영암·무안·신안 현안사업 국비 대거 반영



2022년 정부예산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발표된 가운데 영암·무안·신안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반영예산들을 살펴보면 우선 SOC 사업

무안공항 경유 KTX 2단계 건설 2,617억, 흑산공항 81억
LNG단열시스템, 미래차R&D 대불산단·조선업 활성화 180억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신석-단고, 무안 마산-송석, 영암 금정-유치

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건설공사비(2,617억)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176억) ▲통합관사 신축(10억) 예산이 확보돼 국내에서 유일하게 KTX가 진입하는 지방 공항이 되는 등 무안국제공항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 기대된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인 영암과 대불산단,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총사업비 162억, 2022년 20억)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총사업비 161.5억, 2022년 15.5억) ▲LNG 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센터 구축(총사업비 260억, 2022년 70.5억) ▲조선해양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사업(28억)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14.7억) 등이다.

신안은 흑산공항 예산 81억이 반영됐으며, 22억이 배정된 국립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가 2022년 10월부터 정상 업무가 시작되면 천일염의 품질 및 활용 증진 등 관련 연구가 탄력을 받아 천일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신안 추포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14억)은 유네스코의 신안 갯벌 등과 함께 신안 관광 사업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타를 통과한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사업(3,433억) ▲신석-단고 국도 개선 사업(579억), 국토부 자체선정된 ▲무안 마산-송석(439억) ▲영암 금정-유치(391억) 등이 9월 국토부의 기본계획으로 고시되면 국회에서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예산들이다.

그 밖에도 영산강3·4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에 553억이 반영됐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예산들로는 ▲외국인근로자기숙사지원 42억, 신안군이 전국최초로 자체시행해 국비사업으로 확산된 ▲허가어선구입임대사업(총사업비 150억, 2022년 15억) 등이다.

아울러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을 위한 예산(20억) ▲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사업 예산(3.7억)이 반영되어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문제인정부 국정과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서 의원은 “상반기부터 기재부 및 정부 부처와 예산 협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의 농업예산 확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삼석 “무안·광주공항 통합 ‘군공항 이전 연계’는 안될 말”

국토부 ‘6차 공항개발계획안’ 전면 재고해야... “애초 합의대로 연내 추진을”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9일 “무안·광주 공항 통합은 애초 지자체가 합의한 대로 올해까지 추진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수립 중인 계획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안·광주 공

항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 지역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20일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이 공동 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협약서에는 ‘광주 민간 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상 공항 통합조건인 ‘지자체 간 합의’는 사실상 완료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 의원은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에도 무안, 광주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와 다른 국토부의 계획안은 국가신뢰마저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3개의 지방정부가 어렵게 뜻을 모아 체결한 협약과 앞선 기본계획에 배치되는 계획안을 국토부가 뒤늦게 수립하고 있는 것은 200만 도민과의 신뢰를 깨는 것”이라며 “올해까지 무안, 광주공항 통합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안공항은 민간공항 통합과 관련해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2.5조 원), 활주로 연장(354억 원), 공항편의시설 확장(408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국토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달 내 고시될 예정이다.

서삼석 ‘국토 외곽지역 신활력 전략마련 토론회’ 개최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섬·어촌지역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위기 대응 전략 모색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서삼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김종덕 원장 직무대행)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서 의원은 “국토 외곽지역의 지역소멸 위기 문제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섬·어촌지역에 신활력을 불

어 넣을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민 용진군수, 김병수 울릉군수, 박우량 신안군수의 현장 목소리를 시작으로 신순호 목포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 주제로 발표했다.

박상우 실장은 “낮은 인구밀도,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국토 외곽지역 지역소멸 위기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해 생활 서비스 기준 마련, 기항지 인프라 확충·개선, 공익직불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준수를

위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됐으며, 서삼석 의원의 유튜브 채널 ‘서삼석 TV’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따뜻한 추석, 민생안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희망회복자금 지원!
 추석 이전 90%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